

프로농구 감독 전창진의 승부조작 관련 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edia appeared in a reports related to match fixing allegations by professional basketball coach Jeon Chang-jin

임이식*(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허진석(한국체육대학교 교수)

Issac Li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Jinseok Huh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5월 시작되어 2019년 9월까지 이어진, 프로농구 감독 전창진의 승부조작 및 도박 혐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점, 특히 인권침해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 당시 수사기관은 전창진과 관련한 피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정보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였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 전창진의 실명이 그대로 거론되었고, 혐의가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이어졌으며, 전창진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의 기사들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후 전창진은 승부조작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도박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은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의 관행은 여전하다. 또한 언론은 그 위법한 관행을 비판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표된 피의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상산하여 수사기관에 조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언론의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현재 다시 프로농구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창진의 사례는 그러한 점에서 검토하고 기록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s revealed in media reports related to match fixing and gambling charges by professional basketball coach Jeon Chang-jin, which began in May 2015 and continued until September 2019, especially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at time, the investigative agency continuously disclosed the details of the facts of the crime related to Jeon Chang-jin to the media, and the media reported them as they were. Jeon Chang-jin's real name was mentioned as it was, followed by reports that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charges were true, and articles urging or pressuring Jeon Chang-jin's resignation were also reported. However, Jeon Chang-jin was subsequently not indicted for the match-fixing charge, and was acquitted of the gambling charge and confirm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criminal law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but the practice of illegal disclosure of the facts of the suspected crime by the investigative agency remains. In addition, rather than criticizing and checking the illegal practice, the media has played a role in not only conveying the published facts of the suspected crime as it is, but also helping investigative agencies by expanding and recalculating it. The media needs reflective introspection. As a result, the case of Jeon Chang-jin, who is currently serving as a professional basketball team coach again after being found to be innocent, is worth reviewing and recording in the regard.

Key words : Jeon Chang-jin, professional basketball coach, human rights violations, defamati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before request for public tria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 limis@knsu.ac.kr

I. 서론

이 글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어진 프로농구 감독 전창진의 승부조작 및 도박 혐의 관련 수사 및 재판(이하 전창진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특히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 전창진은 1963년 5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상명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상명초등학교 4학년 때 농구를 시작하였고, 1986년 남자실업농구단인 삼성전자농구단에 입단했다가 1988년 발목을 부상하면서 선수생활을 중단하고 구단 행정직을 맡아 일했다. 전창진은 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하고 삼성이 프로농구 주무단체인 한국농구연맹(KBL)의 회원이 되어 실업체제를 청산하고 삼성 썬더스라는 팀명으로 새출발한 뒤인 1998년 코치직을 맡아 지도자생활을 시작하였다. 1999~2000년 TG삼보 코치, 2002년 TG삼보 감독대행을 거쳐 2003년 TG삼보 감독에 취임하였다. 이후 동부(2005~2009년), KTF(2009년), KT(2009~2015년), KGC(2015년), KCC(2019년~현재) 등의 팀을 맡아 지도하였다. 2004, 2005, 2008, 2010, 2011년과 2021년 KBL의 감독상을 받는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2003년과 2005년에는 남자농구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준우승과 4위를 기록하였다.

전창진의 승부조작 및 도박 혐의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프로스포츠 지도자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은 흔치 않은 사례로서 치열하게 오간 법적 공방의 형식과 내용 및 결과를 고찰할 때 법적으로나 스포츠 역사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 사실이 공개되는 과정은 물론 사건이 일단락되는 시점까지 거듭된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전창진에 대해 가해진 인권침해 요소가 작지 않고 셋째, 전창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프로농구 감독의 자리에 복귀하기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스포츠언론의 도덕적 결함을 선명하게 노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창진이 혐의를 짊어지는 동기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프로농구 종목에 대한 무지가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점을 주시하고 있었을 언론의 공평하고 이성적인 보도가 없었던 점도 문제의 일부에 속하며 이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본다.

승부조작이나 매수, 금지약물 사용, 마약, 도박, 음주운전과 간통 등의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스포츠 관계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로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김기창, 2005),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김현숙, 2019)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범죄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로는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9)과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류영

재, 2018)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스포츠 관계자와 관련한 연구에서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방법론적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창진 사건의 수사와 언론 보도 과정 및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객관적 기록으로 갈무리하고자 한다. 이는 사건의 윤곽을 선명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 있어 주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전창진 사건의 수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탈법성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요소를 적출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셋째, 유사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넷째,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사과와 합리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의 수사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긴밀하게 연동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행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언론의 보도는 사례별로 분류하여 경찰의 발표를 기정사실화하여 수용자에게 직송하는 중계방송식 보도, 여기에 사건과 무관하거나 근거가 희박한 정보를 더해 보도한 업데이트 기사, 자극적 댓글을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한 낚시성 기사,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전창진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한 바탕 위에 자선된 칼럼 등 의견기사 등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찰의 수사내용 발표와 언론의 보도에서 나타난 법률위반요소를 찾아내 검토하고 특히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추출하되 인권침해 부분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법리적으로 세세히 비판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단속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충족할 수도 있는 일련의 방안이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전창진 사건 수사와 보도의 경과

전창진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5월 25일. 오후 8시 45분쯤 SBS가 「'불법 도박·승부 조작 의혹' 현 프로농구 감독 수사」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송출(SBS, 2015). 현직 프로농구팀 A감독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혐의가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내용. SBS 보도 직후 여러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는 같은 내용을 잇달아 보도. 일부 언론은 전창진의 실명을 명기해 보도.

2015년 6월 2, 3일. 경찰은 승부조작 의혹에 관련된 구단 관계자를 소환하여 조사.

2015년 6월 11일. 전창진이 서울중부경찰서를 방문, 자신에 대한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청. 경찰, 전창진 귀가조치.

2015년 6월 25일. 전창진, 경찰 출석해 조사 받음.

2015년 7월 1일. 전창진, 경찰 출석해 조사 받음.

2015년 7월 21일. 경찰이 전창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기각.

2015년 7월 22일. 경찰이 전창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2015년 8월 5일. 전창진, KGC 감독직 사퇴.

2015년 9월 25일. 한국농구연맹(KBL), 전창진에 대해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

2016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창진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도박 혐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창진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018년 9월 14일. 법원이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전창진의 도박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서울지방법원, 2018).

2018년 12월 3일. KBL이 KCC가 요청한 전창진의 코치 등록을 거부.

2019년 3월 28일. 대법원이 전창진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19).

2019년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창진에게 무죄를 선고.

2019년 7월 1일. KBL이 전창진에 대한 징계를 철회.

2. 언론의 보도 추이

1) 초기 보도

SBS 단독보도 사건이 처음 보도된 날은 2015년 5월 25일이다. SBS는 「'불법 도박·승부 조작 의혹' 현 프로농구 감독 수사」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송출하였다. 전창진을 '현직 프로농구팀 A감독'으로 칭한 해당 보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1) A감독은 2015년 2월 자신의 팀 경기 결과를 맞추는 불법 스포츠 토토에 3억 원을 건 뒤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경찰이 확보한 불법 스포츠 토토 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A감독은 3, 4쿼터에 후보 선수들을 넣는 방법으로 해당 경기에서 10점 차이 이상으로 크게 패배하였고, 그 대가로 2배 가까운 고배당을 받았다.

(3) 경찰은 A감독이 해당 경기 이틀 전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다는 진술과 A감독의 차용증을 확보하였다.

(4) 경찰은 A감독이 또 다른 불법 스포츠 토토 업자들과도 돈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 SBS는 A감독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6) 경찰은 조만간 A감독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 타 언론사의 후속보도(2015년 5월 26~27일)

SBS의 단독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이틀 뒤인 2015년 5월 27일

까지 각종 매체에서 동일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 보도 언론사인 SBS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전창진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후속보도는 최초보도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공개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위주로 한 보도가 많았다. 최초 보도와 비교하여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5월 초, 전창진을 출국금지 조치하였다(SBS, 2015).

(2) 경찰에 따르면 전창진은 지인을 통해 빌린 3억 원의 돈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분산 베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연합뉴스, 2015).

(3) 경찰에 따르면 전창진은 이 돈을 한 경기에 모두 걸어 1.9배의 수익을 올렸다(연합뉴스, 2015).

(4) 전창진의 과거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전토토'다(동아일보, 2015; 한겨레, 2015; 매일경제, 2015).

(5) 도박과 연루된 여러 소문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창진이 지난 1-2월 국내 사설 도박장에 여러 번 출입했으며 그가 이번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불법 베팅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조선일보, 2015).

(6)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전창진의 지인 2명이 구속되었다(연합뉴스, 2015).

(7) KBL은 26일 “프로농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팬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SBS, 2015; 동아일보, 2015).

(8) 전창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감독이 지인의 빚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사채업자에게 썬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들이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 지인들은 결국 돈을 탕진했고, 차용증을 쓴 전 감독이 3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조선일보, 2015)

(9) 전창진 측은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혐의 내용을 해명하고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2015).

3) 이후 수사 상황에 대한 추가보도

피의자 소환 조사, 참고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이어지는 수사 상황에 관하여 언론사의 보도가 잇달았고,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2015년 6월 2일과 3일 전창진의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전창진이 속한 프로구단(KGC)의 전·현직 단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매일경제, 2015).

(2) 전창진은 2015년 6월 11일 예고 없이 서울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을 빨리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그를 돌려보냈다(연합뉴스, 2015).

(3)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프로농구팀 KT의 선수, 감독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SBS, 2015).

(4) 경찰은 2015년 6월 25일과 7월 1일 전창진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연합뉴스, 2015).

(5) 경찰은 2015년 7월 22일 전창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기각하였다(SBS, 2015).

(6) 영장 신청 기각 이후, 경찰은 전창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연합뉴스, 2015).

4) 전창진의 무혐의 및 무죄 판결 등에 대한 보도

전창진은 2016년 9월 12일 승부조작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반 도박 혐의에 관하여 약식 기소되었다. 각 언론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나,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승부조작 혐의에 매우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외의 일이었다고 사료된다. 처음 사건이 보도된 2015년 5월 25일 이후 각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수사 상황을 보도한 이유는 전창진이 프로팀의 감독으로서 승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경찰의 혐의 제기 때문이었고, 언론을 접한 대중들의 관심 역시 승부조작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6년 9월 12일의 무혐의 결정으로 승부조작 혐의는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많지 않았다. <표1>참조

표1. 전창진 무죄판결에 대한 주요언론의 보도

동아일보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단순도박만 약식기소
OBS	'승부조작' 전창진 무혐의...단순도박' 약식기소
한겨레	승부조작 굴레에서 벗어난 전창진 감독
경향신문	'승부조작' 전창진 전 감독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檢, 전창진 前농구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도박만 벌금(종합)
SBS	검찰, 전창진 전 감독 도박혐의 벌금 200만 원...승부조작 무혐의
KBS	전창진 前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도박 혐의 벌금 200만원
국민일보	검, 전창진 前감독 도박혐의 벌금 200만원...승부조작은 무혐의 처분
스포츠조선	검찰, 전창진 감독 승부 조작 무혐의...단순 도박 벌금 200만원
스포츠경향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KBL 퇴출징계 재심의해야 할 듯
서울신문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동아일보	'승부조작 무혐의' 전창진 前감독...KBL 측은 징계 재논의 계획 아직 없어
세계일보	승부조작 무혐의, 네티즌...“짹짹하다” VS “다행이네요”
한국경제	승부조작 무혐의...상처만 남은 전창진

3. 언론보도의 인권침해 위험

1)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의 필요성 및 한계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범죄혐의의 보도는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범죄는 공동사회 생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일탈적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대중의 흥미를 충족하는 동시에 범죄행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한 교

육적 효과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경과와 그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보도는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적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의 강구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언론이 행하는 공적 과업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대법원, 1998:1999).

그러나 범죄혐의의 보도는 범죄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법이 정한 형사처벌을 받는 외에도 사회 윤리적 비난, 명예의 손상, 주변의 멸시와 배척 등 법 외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불이익의 일차적 원인이 범죄자 자신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보도된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법 외적으로 받는 명예의 손상, 차별대우 등의 불이익의 범위와 강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설령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존엄성을 부인하거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등의 무분별한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동일한 언론보도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의 보도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다. 범인이라는 추정 내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관계자의 명예는 쉽게 손상되고, 일단 손상된 명예는 나중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07).

(2) 무죄추정 원칙 위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또한 피의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될 경우, 재판절차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될 수 있다.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가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검찰,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 해당 사건을 재판할 관할 법원의 재판부는 스스로 사건을 파악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하여 그 보도내용을 접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는 단순히 피고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류영재, 2018). 나아가, 대중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조성된 사실관계를 먼저 접한 뒤 사건의 진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여기기 쉽고,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사실의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전모가 드러난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요식적 추인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되기 쉽다(김기창, 2005).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원이 상식 밖의 판단을 하였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3조에 따른 법원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협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이 때문에 형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형법은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발표’라는 이름으로 범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상 책임을 진 예가 없거나 드물기 때문이다(이정렬, 2020).

다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명예의 훼손 등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대법원, 1999). 또한 통상 공표된 피의사실은 언론에 의하여 널리 전달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언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대법원, 2007).

3) 형사 사건 보도에 있어 언론사의 주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특히 공소제기 전의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의 보도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언론은 가능한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사실이 보도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삼아 성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익명보도의 원칙

대법원은 범죄 혐의를 보도할 때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는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를 구분하여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

이다. 즉, 판례는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또한 범죄혐의에 관한 실명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이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보도할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대법원, 1998).

(2) 보도에 앞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이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한편 범죄혐의사실의 보도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소인이나 수사기관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피의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보도를 이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한 경우, 범죄혐의보도가 갖는 속성을 활용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쉽게 믿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피의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면 수사기관의 그러한 시도는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있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히 범죄사실의 보도에 있어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는 언론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범죄혐의보도는 고소인 또는 수사

기관이 활용하기 간편한 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균형 잡힌 객관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보도 내용의 공정성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혐의 사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유죄를 암시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유죄의 인상을 주는 용어나 표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또한 ‘공정한 보도’의 의무와 관련하여, 언론이 과거 스스로 보도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가 밝혀지거나 불기소 처분, 무죄 선고 등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에 언론은 그러한 오류 또는 사정의 변경에 대하여 전의 보도와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혐의 대상자로서는 사실을 정정하는 언론의 보도 외에는 언론에 의하여 전파되고 기정사실화된 가치평가를 회복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제3장에서 피해자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은 정정보도 등 청구의 인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피해자와 언론의 대립관계를 형성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달리 언론 스스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전의 보도와 비슷한 비중으로 충분한 취재를 통한 보도를 하는 관행 내지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 취재 보도를 하는 경우 이전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또는 법원이 배상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로 고려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전창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1) 최초보도 (2015년 5월 25일)

사건의 시작을 알린 SBS의 단독보도는 ‘A감독’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범죄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A감독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은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SBS가 언급한 A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상

의 전문체육인으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승부를 조작하여 고의로 패배하는 것)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불법 스포츠 토도업자들과의 돈거래, 또는 불법 스포츠 토도에서의 고배당)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에는 ‘불법도박’, ‘승부조작’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위의 보도 당시 전창진의 혐의는 공소제기 전일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직 전창진에게 정식으로 소환조사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창진에 대한 조사는 한 달 뒤인 2015년 6월 25일에야 처음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은 공소제기 전의 혐의사실에 해당하고, 만일 위 정보를 수사기관이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의 행위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들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피의사실 공표 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그러나 SBS는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반면 당사자인 전창진의 입장은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당사자의 해명을 전혀 취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독 보도를 송출하여야 할 만큼 보도사안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해당 사안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보도의 내용이 혐의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후속 보도

전창진 사건을 다룬 초기의 후속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창진의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최초 보도 직후부터 전창진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보도를 송출하였다.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한편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이에 관하여, 전창진이 프로농구 감독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징이 범죄사건의 보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실명의 보도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경찰이 제공한 전창진의 혐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혐의가 사실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및 제목이 보도된 반면 전창진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취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공정한 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언론은 전창진의 혐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의 일시와 상대팀이 특정되었고, 전창진이 승부조작의 결과 1.9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각 언론사에서 담당 수사팀을 취재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은 경찰이 전창진을 출구금지한 사실, 전창진의 지인 2명이 이미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비록 사실관계의 전달이기는 하나 독자로 하여금 전창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전창진의 과거 별명이 ‘전토토’였다는 사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과거 전창진의 발언을 전달하는 내용의 추가 보도는 마치 전창진의 해당 혐의가 ‘과거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동아일보, 2015; 한겨레, 2015; 매일경제, 2015).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창진이 과거 도박 전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혐의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유죄의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조선일보, 2015). 또한 제목에서 ‘혐의’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적발’ 또는 ‘불법도박’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중앙일보, 2015; 경향신문, 2015; 매일경제, 2015), 과거의 승부조작 사례, 또는 승부조작 수법과 전창진의 해당 혐의를 연결 지어 분석하거나 전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동아일보, 2015).

셋째, 혐의에 관한 전창진의 입장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관한 보도에 비하여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았다. 전창진은 변호인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축약하여 전달하는데 그쳤고, 그 전체 내용을 전달한 언론사는 일부에 불과하였

으며, 전달의 방식 역시 언론사가 전 감독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도자료의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BS, 2015; KBS, 2015; 연합뉴스, 2015; 매일경제, 2015).

3) 이후의 수사 상황에 관한 보도

이후의 수사 상황에 관하여, 언론은 경찰이 제공한 수사 관련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실명, 확보한 증거, 피의자의 석연치 않은 태도 등을 계속하여 언론에 공표하였고, 언론은 해당 정보를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언론보도의 내용은 전창진이 유죄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찰이 가진 유죄의 심증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기사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는 2015년 7월 1일자 속보로 ‘전창진 감독, 오늘 중부서 2차 출석 ...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안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전창진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보도를 했다(중앙일보, 2015).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조사 거부 사실을 언론에 알렸으며 언론은 이를 기사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전창진이 혐의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 역시 전창진이 유죄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2015년 7월 2일에 있었던 MBC 보도의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언론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전 감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라는 앵커의 발언에 이어, 취재 기자는 “전창진 감독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해당 보도는 이어 “전 감독이 1차 조사 때와 다른 변명을 했고,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전창진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사실 역시 보도하였다(MBC, 2015).

특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인 2015년 7월 21일 수사발표를 통하여 차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임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각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시기 언론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창진이 조작 경기 전후에 피의자들과 ‘대포폰’으로 통화하였다는 내용(중앙일보, 2015; 한겨레, 2015), 득점선수를 빼고 후보를 기용하였으며 지고 있는데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았다는 내용(연합뉴스, 2015) 등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유죄의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4) 불필요한 논점 확대와 영향력 행사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전창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이 논점과 무관하게 보도 범위를 확장하여 사안과 관계없는 과거의 일을 범

죄의 일부로 구성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전창진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한 다음 이를 심판하거나 연관조치를 요구하는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창진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섰을 때, 일부 언론은 전창진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구단으로부터 해임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현실적으로 전창진 감독이 더 이상 KGC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승부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동희 전 감독과 마찬가지로 농구계에서 영구제명이다.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나 법정 공방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자명하다.

KGC로서는 전 감독의 입장이나 경찰수사 발표만 무조건 믿고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스포츠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승부조작 혐의다. 전창진 감독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은 명분이나 실리에서 모두 득 될 것이 없다.

전창진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개인 사정이나 불투명한 금전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며 KGC 구단과 팬들에 안긴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전 감독이 KGC 사령탑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든지 KGC 구단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데일리안, 2015).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전창진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기사를 중립적으로 다루려 노력한 흔적은 없지 않으나 경찰 발표를 기정사실화하여 전창진의 승부조작을 전제로 삼고 있다. 설령 전창진이 승부조작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개인 사정이나 불투명한 금전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며 KGC 구단과 팬들에 안긴 피해'라는 승부조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불필요하게 거론하며 사실상 소속 구단에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전창진은 결국 2015년 8월 4일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명목상으로는 '자진사퇴'였지만,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감독을 해임할 때 대부분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과 당시 전창진이 처한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결심 이상의 의견교환과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기사에서 전창진의 발언처럼 인용부호가 사용된 부분은 기사가 직접 청취한 내용이 아니라 구단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의 일부분일 것이다.

KGC인삼공사는“지난 4일 저녁 전창진 감독이 구단에 감독직 사퇴 의견을 전해왔다.”고 5일 밝혔다. 전창진 감독은“지난 3개월여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KBL에서 요청한 등록유예 마감 기한인 8월14일 이전까지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최근 검찰로의 사건 송치도 지연되는 등 수사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구단과 연맹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스포츠한국, 2015).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도 언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여론의 압박 앞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KBL은 전창진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농구팬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다. KBL은 “2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해 프로농구가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농구 팬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거나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단체가 서둘러 팬들에게 사과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연맹구성원인 회원구단(KGC)과 전창진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창진이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의 사과문을 낼 당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불법도박 및 승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약속” (스포츠동아, 2015)한다고 다짐한 KBL은 전창진이 기소된 다음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프로농구계에서 퇴출했다. 하지만 KBL의 징계사유로 든 항목들은 전창진의 승부조작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중략) ‘무기한 KBL 등록 자격 불허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감독과 박성훈은 향후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KBL 퇴출을 의미한다. KBL은 그 배경으로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 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KBL 재임 기간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 (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 등으로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MK스포츠, 2015).

이 당시 전창진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는 보도는 매우 찾기 어렵다. 다만 2015년 7월 21일 경찰이 신청한 전창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다음 일간스포츠와 한 ‘단독인터뷰’가 2015년 7월 30일자 보도로 남아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감독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감독으로서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가 농구인생 40년인데 한 번에 무너졌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 농구 판을 떠날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 공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농구를 40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는가.” 라고 토로하였다(일간스포츠, 2015). 전창진은 대중 앞에 나서 심경을 말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미 나는 나쁜 놈이 됐고 승부조작한 놈으로 매도됐죠. 변호사가 일정이 있어서 2차 조사 날짜를 이를 미루자고 했는데 그 내용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들 기사를 써버리니 내가 말할 게 뭐 있나요(일간스포츠, 2015).

5) 전창진의 무혐의 판결 후 보도

검찰은 2016년 9월 12일 전창진의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일반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처분하였다. 언론이 ‘전토토’와 같은 과거의 별명을 사용하여가며 적극적으로 보도한 전창진 혐의사실의 요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승부조작’ 혐의이다. 프로농구팀의 감독이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은 스포츠팬들을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했고, 언론이 이에 부응하여 경찰의 수사발표를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전창진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가혹한 여론의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승부조작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명확하다. 경찰이 제시한 유죄의 증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미약하여 검찰이 공소제기 자체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전창진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린 것은 전창진의 혐의에 관한 첫 보도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 혐의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부터 몰아내었던 일련의 소동이 사실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조력한 언론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진단을 한 언론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승부조작의 무혐의 부분은 축소하고,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던 ‘일반 도박죄’의 혐의가 약식 기소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듯한 제목의 보도가 적지 않았다(SBS, 2016). 심지어 일부 언론은 ‘승부조작 무혐의, 네티즌 ... ‘찔찔하다 VS 다 행이네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의견은 무혐의 처분을 지지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으로 나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는 승부조작에 관한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에 해당한다(세계일보, 2016). 해당 기사를 보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은 없고, 오히려 전창진이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뒤에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네티즌의 ‘찔찔하기 그지 없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케이스가 한 둘이어야지.’라는 의견이 소개되어 있다.

물론 전창진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판단이나 감정이 다를 수 있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전창진의 혐의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의 의견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적절히 취재하고 정리하여 기사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나 취재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익명으로 게시된 네티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긴 싸움 끝에 무혐의 처분

을 받아낸 전창진에 대하여 계속하여 결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III. 결론 및 제언

프로농구 감독 전창진의 승부조작 및 도박 혐의 관련 수사 및 재판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7년 전에 발생하였고, 사건이 일단락된 지도 5년이 지났다. 2015년 5월 25일 SBS의 단독 보도로 시작되어 언론 및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은 이른바 ‘극장식 수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경찰은 당사자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혐의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렸고, 이후에도 관련자의 소환, 거짓말탐지기 조사, 영장 신청 등 수사의 일정과 내용을 언론과 공유하며 피의자의 유죄 심증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결과적으로 전창진의 승부조작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도박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경찰이 통감하여야 할 법적, 사회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경찰이 대중에게 공개한 수사내용 및 과정의 상당 부분이 전창진 개인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창진이 훗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의 극장식 수사가 진행되는 2년 내내 그를 압박하고 절망하게 한 것은 바로 언론의 보도행태였다. 언론의 보도행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전창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그 경과에 대한 대언론 발표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둘째, 언론의 보도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창진이 승부조작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모욕성 보도도 빈발했다.

셋째, 전창진이 소속한 구단을 겨냥해 해임을 촉구하거나 전창진의 사퇴를 강요하는 칼럼 등 의견기사가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넷째, 전창진에 대한 악마화 작업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창진은 경찰이나 검찰, 언론 어느 쪽으로부터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언론은 ‘동일지면 동일분량’의 정정기사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창진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섯째, 스포츠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심판관의 지위를 자임한 데서 비롯되며 이는 여타의 스포츠 관련 인물 보도에서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농구감독 강동희의 승부조작 관련 수사 보도,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원폭력 폭로와 배구계 퇴출 관련 보도, 배구선수 조송화의 퇴단과 소송 등에 관한 보도에서 꾸준히 반복·재생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창진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이나, 그것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한 언론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언론의

관행은 여전하다. 언론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그 보도의 내용이 관련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보도의 경우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취재의 의무를 부과하는 판례는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성과 신속성을 외면할 수 없는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언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무결점의 보도를 무작정 요구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결국은 언론이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자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유인(誘因) 내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 보도와 동일한 비중과 분량으로 그 사실을 정정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하는 것 외에는 그 피해를 복구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노력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 언론과 피해자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언론 스스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전의 보도와 비슷한 비중으로 충분한 취재를 통한 보도(“자진 정정보도”)를 하는 관행 내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진 정정보도는 법원의 확정판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바뀌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언론사가 과거 보도하였던 기사의 내용이나 기조에 필요 이상으로 얽매이지 않고 사정변경의 의미와 가치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진 정정보도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건으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 언론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자진 정정보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역시 자진 정정보도를 처음부터 엄두에 두고 무책임한 보도를 남발하는 경우와 같은 악용의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법원이 감정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언론이 이전의 보도 과정에서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경주하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창완(2015, 5월 26일). 전창진 감독 변호인 “승부조작·불법 배팅 없었다”.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43

47&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김기창(2005),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pp. 15-39).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도환(2015, 5월 26일). 전 감독 변호인 “승부조작·불법 배팅 사실 없다”.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82883>
 김동규(2015, 7월 22일).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722177651004?section=search>
 김동찬(2015, 5월 26일). 전창진 감독 변호인 “승부조작·불법 배팅 사실 없다” (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6170551007?section=search>
 김지한(2015, 5월 27일). 코트 ‘인생역전’ 전창진... 불법 도박으로 무너지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889187>
 김지한, 박병현(2015, 7월22일). 전창진 감독, 대포폰으로 3억 대리배팅 지시.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289539#home>
 김형열(2016, 9월 12일). 검찰, 전창진 전 감독 도박혐의 벌금 200만 원...승부조작 무혐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8302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김희선(2015, 7월 30일). [전창진 단독인터뷰] ① “내가 피해봤으면 봤지, 나쁜 짓하고 산 적 없다”. 일간스포츠 <https://isplus.com/2015/07/30/sports/sportsgeneral/18349588.html>
 남재현(2015, 7월 2일). 승부조작 의혹 전창진 감독... 16시간 넘게 경찰 조사.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26582_30285.html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동아일보(2015, 5월 26일). KBL, 전창진 승부 조작 혐의에 공식입장 “또 불미스러운 사건, 농구팬들에게 사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526/71469954/1>
 동아일보(2015, 5월 26일). 강동희 악몽 여전한데...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혐의, 무려 3억 배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525/71455607/1>
 동아일보(2015, 5월 26일). 전창진 승부 조작 혐의, ‘전토트’ 별명 현실되나...

<https://bizn.donga.com/3/all/20150526/71467107/2>
 동아일보(2015, 5월 26일). 전창진, 승부조작 혐의...왜
 ‘전토토’ 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더니 거짓말?
<https://bizn.donga.com/3/all/20150522/71421423/3>
 류영재(2018).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 4(1) 125-173.
 매일경제(2015, 5월 26일). 명장이라던 전창진 감독 스포츠
 도박 혐의 ‘충격’ ...어쩌다 이 지경까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5/500761/>
 매일경제(2015, 5월 26일). 전창진 감독 과거 인터뷰 주목
 “왜 나를 ‘전토토’ 라 부르는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5/500680/>
 매일경제(2015, 5월 27일). 경찰, ‘전창진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 KT·KGC 단장 소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6/532232/>
 매일경제(2015, 5월 27일).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혐의에
 변호인 측 “당당히 의혹 밝힐 것”.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5/05/507052>
 박대웅(2015, 8월 5일). ‘자진 사퇴’ 전창진 감독, KBL의
 후속 조치는?. 스포츠한국.
<http://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5354>
 서민교(2015, 9월 25일). KBL,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전
 감독 ‘무기한 퇴출’ 중징계. MK스포츠.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10&aid=0000275728>
 설승은(2015, 6월 11일). 경찰에 불쑥 나온 전창진, 조속한
 소환 조사 요구(종합2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1094553004?section=search>
 성진혁(2015, 5월 27일).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미스터리’ .
 조선일보.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7/2015052700272.html
 세계일보(2016, 9월 13일). 승부조작 무혐의,
 네티즌... ‘찔찔하다 VS 다행이네요’ .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913000461>
 손형안(2015, 6월 22일). 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의혹’ 추일승 감독 참고인 조사.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697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스포츠동아(2015, 5월 26일).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혐의로
 입건... KBL “사실일 경우, 엄중조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0358497>

안서현(2015, 6월 15일). 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의혹 KT
 선수 소환.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25565&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연합뉴스(2015, 5월 25일). 경찰, 현직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의혹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5078700004?section=search>
 연합뉴스(2015, 5월 26일). 프로농구 승부조작·도박 의혹
 전창진 감독 출국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6129600004?section=search>
 연합뉴스(2015, 6월 25일). ‘승부조작 의혹’
 프로농구 전창진 감독 경찰 출석(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50625059951004?section=search>
 연합뉴스(2015, 7월 2일). 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
 추궁...전창진 감독은 부인(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1075652004?section=search>
 윤형중(2015, 5월 26일). 별명 ‘전토토’ ...농구팬 눈이
 정확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92887.html
 윤형중(2015, 7월 21일). 조작 의혹 경기 전후...전창진,
 피의자들과 ‘대포폰 통화’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01164.html
 이경렬(2020).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피해자학연구, 28(3) 59-91.
 이준목(2015, 5월 28일). 전창진 맞이한 KGC, 수렁에 함께
 빠지면 안 된다. 데일리안.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19&aid=000>